여야 '가축법' 절충…국회 정상화 급물살

'쇠고기 파동' 이후 파행 일로에 있는 18대 국회의 개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통합민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측이 12일 한나라당의 국회 개원을 위한 홍준표-원혜영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가축법 개정 불가'를 천명해온 한나라당과 '재협상 선언 이전 개원 불가'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각각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6·10을 계기로 시민사회의 정서가 드러난 이상 이제는 쇠고기 문제를 '장외'가 아닌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상황인식도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꽉 막혔던 여야간 대화 통로가 열리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명심해야 한다"며 "집회 참여자 얼굴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해 등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가축법 개정에 대해 '논의'는 가능하지만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가간의 협상을 국내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외교관례와 국제신인도 측면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을 '확약'하지 않는 한 등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개정을 확실히 약속하지 않는 한 등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겉으로는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김종률, 민노당 이정희, 민주당 최인기, 선진당 류근찬(왼쪽부터) 의원 등 야 3당 정책위의장단이 11일 국회에서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예방법 국회 공청회 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쇠고기 문제 장외 아닌 정치영역서 해법찾자" 공감

13일 귀국 당·정·청 방미단 활동 결과가 등원 변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오는 13일 효순·미선양 추모 6주기과 6·15 공동선언 기념일까지 협상을 미룬 채 대여투쟁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여당의 공청회 개최 수용을 대여투쟁의 예봉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여당의 '여야정정책협의회' 제안을 거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등원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변수는 당·정·청 방미단의 활동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귀국하는 방미단이 미국과의 추가협의에서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경우 가축법 개정 없이도 국회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출신 與의원 릴레이 인터뷰 목포출신 서울 금천 안형환 의원

"광주 문화중심도시·J프로젝트 관심 깊어 호남민도 이제는 지역감정 굴레 벗어나야"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목포고 출신이다. 지금도 목포에 어머니가 살고 있다. 그의 책상에는 목포고에 교훈처럼 전해 내려오는 '잠룡인이여, 가슴에 태양을 품어라'라는 글귀가 새겨진 목포고 달력이 놓여있다. 그는 '마음속 지역구는 목포'라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했다.

-어떤 상임위를 신청했나.

▲문화관광위를 신청했다. 우리 미래의 경쟁력은 관광을 포함한 문화산업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건설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호남 발전에 대한 구상이 있나.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하면 한나라당 내에 광주·전남 출신 의원은 나와 심재철·정양석·이정현 의원 4명뿐이다. 따라서 책임감을 느낀다. 호남의 애환과 바라는 바를 정부와 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 현안 중 관심을 갖는 것은.

▲오래전부터 J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왔다. J프로젝트는 호남의 사업이기 전에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 해남·영암에 제2의 마카오를 만들 수 있다. 동북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F1사업도 이 사업 범주안에 들어가야 한다.

-호남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권 교체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감을 갖기를 부탁한다. 이제 스스로 지역감정의 덫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권 고소·고발 '終戰'…검찰의 선택은

무혐의·기소유예 관측 속 일부 기소 가능성도

지난해 17대 대선 때 이전투구 식으로 고소·고발을 쏟아냈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 잇따라 상대 당에 대한 고소·고발을 일괄 취소함에 따라 이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측 인사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BBK 연루설을 주장한 정동영 전 대선 후보와 박영선 의원 및 이해찬·김현미·김종률 전 의원 등이, 한나라당 쪽에서는 당시 여권과 김경준씨의 결탁설 등을 주장한 정두언·차명진 의원 및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이들 정치인은 대부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는데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고발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어차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고소·고발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해야 하고 기소 등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관련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할지, 아니면 네거티브성 정치 공세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정식 재판에 넘길지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분만 준다면…" 민주 등원론 확산

손학규 대표 "정부·여당, 야당 공간 제공해야"

6·10 촛불시위 이후 통합민주당 내에 등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전히 장외투쟁 여론이 많긴 하지만 이쯤에서 국회로 들어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등원 명분. 민주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수용하는 것을 등원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불가' 의지를 보이는데도 여당과의 개원 협상을 시작한 것은 당내에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 등원 여론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손학규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일 촛불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로부터 제1야당으로서의 다른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해도 마이동풍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풍토에서는 국회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명분만 있으면 등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지도부 내에는 국회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명분이 중요하다. 그것만 해결되면 국회에 들어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의회의 존재무대인 원내공간을 방치한 채 장외만 고집할 경우 오히려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 여권이 태도를 전환하는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라인 간의 협상을 통해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최고위원 출마 김효석 경선 참여 포기

7·6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초 최고위원 경선 참여가 유력했던 김효석 의원은 뜻을 접은 반면 박주선 의원은 다음주 초반 출마 선언에 나선다. 김효석 의원은 주변의 잇따른 출마 권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당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면 최고위원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원 구성 협상에 따라 국회 재경위원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10개월밖에 하지 않은데다 당내에서 경제 및 재정분야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

'성폭행 연루에 비리 의혹까지…' 광주시의원 자질 논란

여성단체들, 공개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여성단체들이 각종 의혹에 연루,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시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11일 '성폭행과 비리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도덕성 문제로 시비가 일고 있는 의원들은 광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한 S의원을 겨냥, "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라며 "성폭력 연루·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이상 개인 비리를 변명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K의원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설이 떠도는 등 일부 시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2일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이들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